

# 조 례 안 예 고

창원시의회 공고 제2023 - 5호

## 창원시 깨끗한 800리 바닷길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깨끗한 800리 바닷길 만들기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5일

창원시의회의장 김 이 근

### 1. 자치법규명

「창원시 깨끗한 800리 바닷길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제정이유

창원시 연안해역에서의 해양쓰레기 발생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양폐기물 없는 청정 바다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아름다운 해안”을 “깨끗한 연안”으로 수정함(안 제1조 및 제3조)
- 나. 해양 및 연안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다. 시장, 시민 및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라. 해양쓰레기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3조의2)
- 마.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을 수정함(안 제4조)
- 바. 해양환경지킴이 채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수정함(안 제5조)
- 사.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의2)
- 아.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

### 4. 의견제출

-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창원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입법예산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다. 의견 제출할 곳: 우)51435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의회 의회사무국 입법예산팀(전화:055-225-5375, FAX:055-225-4743)

- 라. 의견제출 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jeonhr1@korea.kr), 직접 방문 등

# 창원시 깨끗한 800리 바닷길 만들기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4
----------	-----

발의연월일 : 2023. 1. 6.

발 의 자 : 김묘정·권성현·김경희·김남수·김상현·김현일  
문순규·박강우·박해정·백승규·서명일·서영권  
삼영석·오은옥·이우완·이완주·이종화·이찬수  
이해련·정순옥·진형익·최은하·한상석·한은정  
항점복 의원(25명)

### 1. 제안이유

창원시 연안해역에서의 해양쓰레기 발생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기본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양폐기물 없는 청정 바다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아름다운 해안”을 “깨끗한 연안”으로 수정함(안 제1조 및 제3조)

나. 해양 및 연안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다. 시장, 시민 및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라. 해양쓰레기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안 제3조의2)

마.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을 수정함(안 제4조)

바. 해양환경지킴이 채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수정함(안 제5조)

사.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의2)

아.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

###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나. 관계법령

## 창원시 깨끗한 800리 바닷길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깨끗한 800리 바닷길 만들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아름다운 해안”을 “깨끗한 연안”으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해양”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양을 말한다.
2. “연안”이란 창원시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연안관리법」 제2조에 따른 연안해역(沿岸海域)과 연안육역(沿岸陸域)을 말한다.

제3조의 제목 “(시장의 책무)”를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아름다운 해안”을 각각 “깨끗한 연안”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해양쓰레기 배출을 억제하고, 깨끗한 연안을 만드는데 적극 협조해야 한다.
- ④ 해양에서의 개발·이용행위 등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사업을 하는 자는 해양오염 및 해양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실태조사) ① 시장은 해양쓰레기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할

해역의 해양쓰레기 발생원인, 유입 경로, 발생량, 발생 종류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쓰레기의 지속적인 유입으로 해안오염이 가중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를 “해양쓰레기 발생 예방”으로,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기 위해”를 “깨끗한 연안을 만들기 위하여”로, “수립할 수 있다”를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창원시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를 “시장이 따로 정한다”로 한다.

제6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지도·감독) ① 시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을 추진하는 자로 하여금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사업장을 방문하여 그 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가지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7조를 제18조로 하고, 같은 조(중전의 제17조) 중 “필요한”을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으로 하며,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포상) 시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해양쓰레기 관리에 이바지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창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참 고

##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해안에서의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처리하는 등 해양쓰레기 없는 <u>아름다운 해안</u> 을 가꾸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u>깨끗한 연안</u>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u>&lt;신 설&gt;</u>  <u>&lt;신 설&gt;</u>  1. 2. (생략)	제2조(정의) ----- -----. 1. “해양”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양을 말한다. 2. “연안”이란 창원시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연안관리법」 제2조에 따른 연안해역(沿岸海域)과 연안육역(沿岸陸域)을 말한다. 3. 4.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처리하는 등 <u>아름다운 해안</u> 을 가꾸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책무) ① ----- ----- ----- ----- <u>깨끗한 연안</u> ----- ----- -----.



② 시장은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시장은 해양쓰레기의 지속적인 유입으로 해안오염이 가중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수거·처리 등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② ----- 깨끗한 연안-----  
-----  
-----.

③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해양쓰레기 배출을 억제하고, 깨끗한 연안을 만드는데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④ 해양에서의 개발·이용행위 등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사업을 하는 자는 해양오염 및 해양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의2(실태조사) ① 시장은 해양쓰레기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할 해역의 해양쓰레기 발생원인, 유입 경로, 발생량, 발생 종류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 해양쓰레기 발생 예방 -----  
-----  
-----  
----- 깨끗한 연안을 만들기 위하여 -----

포함한 창원시 깨끗한 800리 바닷길 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 8. (생략)

제5조(해양환경지킴이) ① (생략)

② 해양환경지킴이 채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깨끗한 800리 바닷길을 만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 4. (생략)

<신설>

<신설>

-----  
-----  
-----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 8. (현행과 같음)

제5조(해양환경지킴이) ① (현행과 같음)

② -----  
-----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재정지원) -----  
-----  
-----  
-----  
-----  
-----.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의2(지도·감독) ① 시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을 추진하는 자로 하여금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사업장을 방문하여 그 사무를 검

<신 설>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하는 공무원  
 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가  
 지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7조(포상) 시장은 체계적이고 효  
 율적인 해양쓰레기 관리에 이바지  
 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창원시 포상 조례」에 따  
 라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세칙) -----  
 -----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  
 -----.

##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가. ~ 바. 생략

사. 자연보호활동

아. ~ 더. 생략

##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 퇴적물 관리법 (약칭:해양폐기물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을 환경친화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환경의 보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2. “배출”이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을 말한다.
3. “해양”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양을 말한다.
4. “바닷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5. “해양폐기물”이란 해양 및 바닷가에 유입·투기·방치된 폐기물을 말한다.
6. “해양오염퇴적물”이란 해양에 퇴적된 물질로서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해양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물질을 포함하고 있거나 사람의 건강, 재산, 생활환경 또는 자연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말한다.
7. “해역관리청”이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해역관리청을 말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 예방 및 환경친화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관리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현황조사 및 수거·정화 등 처리에 관한 사항
3. 하천·소하천에서의 폐기물 해양 유입 방지에 관한 사항
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발생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사항
5.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로 인하여 오염된 해양환경의 개선·복원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6.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를 위한 자원 확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해역관리청은 관할 해역·수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된 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생략

4. “폐기물”이라 함은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그 상태로는 쓸 수 없게 되는 물질로서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물질(제5호·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물질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5.~22. 생략

## ■ 연안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안”이란 연안해역(沿岸海域)과 연안육역(沿岸陸域)을 말한다.

2. “연안해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을 말한다.

가. 바닷가[「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나. 바다[「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영해(領海)의 외측한계(外側限界)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3. “연안육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을 말한다.

가. 무인도서(無人島嶼)

나. 연안해역의 육지쪽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어촌·어항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국가어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천미터) 이내의 육지지역(「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은 제외한다)

##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해양”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내수·영해·배타적경제수역·대륙붕 등 대한민국의 주권·주권적권리 또는 관할권이 미치는 해역과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정부 또는 국민이 개발·이용·보전에 참여할 수 있는 해역을 말한다.

## ■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해양환경에 관한 국제협약을 준수하면서, 우리나라 해양환경이 가지는 특성을 고려하여 해양오염 및 해양생태계 훼손을 예방하고 해양환경을 적정하게 보전·관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에 따라 지역적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하면서 관할해역의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